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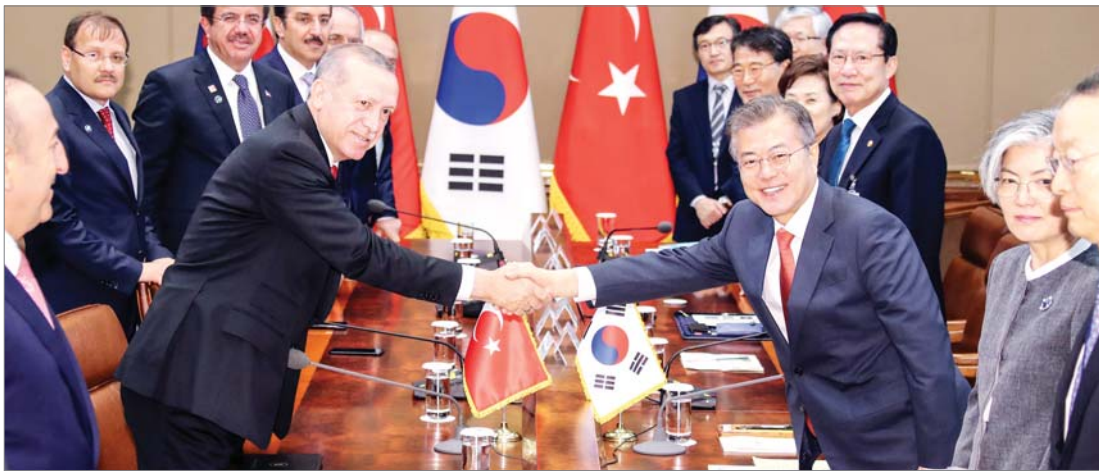


[한반도 봄바람] 남북정상회담 계기 韓경제 미치는 영향은 03



코스피	2505.61 (-9.77)	코스닥	871.03 (-4.92)
금리 (연평균)	2.24 (+0.02)	환율 (원/달러)	1076.10 (+8.10) (2일)

포스코 차기회장 구자영·김준식·장인화 ‘3파전’



약수하는 한-터키 정상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만나 확대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태준·정준양·권오준 前회장 대리전 양상

포스코가 권오준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선언으로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시스템 가동에 돌입했다.

정권 초기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회장 중도 낙마 사태를 이번 예야말로 끊겠다며 예전보다 한층 투명한 선발 절차에 공을 들여 후보군 물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차기 회장 선출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전임 회장들의 ‘대리전’으로 3파전을 형성할 것이라는 하마평이 무성하다.

포스코는 지난달 23일 1차 회의에 이어 27일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승계 카운슬(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다. 최근 열린 1차 회의에서 승계 카운슬 운영 방안과 CEO 후보 요구 역량 및 발굴 방안 등을 논의했다면 2차 회의에서는 후보군 선정 리스트를 공유하고, 보강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가운데 내부에서는 장인화 철강사업부문 2부부장(대표이사 사장), 외부에서는 김준식 전 사장과 구자영 전 SK



구자영 前 SK이노 부회장 김준식 前 사장 장인화 사장

이노베이션 부회장 등이다. 포스코 철강 2부부장을 맡고 있는 장인화 사장은 OB출신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내부측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 금속공학과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일명 ‘포마’(포스코 마피아)가 아닌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출신으로 개혁을 이루기 적당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장인화 사장은 권오준 회장 체제의 실체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외부에서는 구자영 전 SK이노베이션 부회장과 김준식 전 사장 이 거론되고 있다. ‘철강왕’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사단인 구자영 전 부회장은 엔지니어 출신이다. 구 전 부회장은 버클리대 재료공학박사 출신으로 1988년 포스코에 스카우트돼 1993년까지 상무로 재직한다. 특히 포스코는 전통적으로 엔지니어 출신이 회장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구 전 부회장도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2009년 정준양 회장이 선임됐을 때도 엔지니어 출신인 정 회장과 재무·관리 출신인 윤석만 전 포스코 사장이 경쟁했다. 당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CEO추천위원회도 검증과정에서 ‘풍부한 현장경험이나’ ‘대내외 관계 개선 및 조직 관리’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면반박

“국제기준 따른 것... 분식회계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 위반’ 통보를 내린 것과 관련해 “분식회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계 기준 인식 및 적용에 대한 차이로, 회사는 외부전문가와 협의 등을 통해 이행했다”며 “해당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8면>

금융원은 전날 적자를 내다 자회사 지분가치 변경으로 대규모 회계상 이익을 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이란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한 금융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마치고 이런 내용의 조치 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 삼성·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할 때 관련 회계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한 뒤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내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을 포함한 다수 회계법인에 의견에 따라 충실히 이행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과 가시화에 따른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Biogen)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분법 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했다. 합작사 바이오젠이 콜옵션(50%-1주)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병화 상무는 “상장 시 모든 회계처리는 3대 회계법인(삼정·안진·삼일)으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며 “회사는 ‘고의로’ 회계를 조작해야 할 동기가 없으며 이로 인한 실익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에서 회사 측의 입장을 충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영 기자 parkmi7854@

엘리엇의 파상공세

“삼성합병 부당 개입... 韓정부 상대 ISD 추진”

(투자자-국가 간 소송)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 개입으로 당시 합병에 반대하던 펀드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엘리엇은 2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Investor-State Dispute)의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가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

결센터(ICSID)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중재의사가 있는 지 타진하는 절차다.

엘리엇은 이날 낸 발표문에서 “당시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발생한 손해 배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전임 정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행위는 FTA를 위반한 것으로 엘리엇에 대한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해당된다”며 “정부가 FTA 협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엘리엇 및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터지며 특검은 국민연금이 직권을 남용해 합병에 찬성했다고 판단하고 법원은 1심, 2심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안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엘리엇이 ISD에 나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엘리엇의 중재에 응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은 잘못”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손범지 기자 sonumji301@

소액단기보험사 등 특화금융사 나온다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온라인전문보험회사 활성화 투자자문서비스도 개인 확대

정부가 혁신적 참가자의 금융시장 진입이 쉽도록 문턱을 낮춘다. 애완동물 전문 보험회사나 주식중개 전문 증권사, 1인 투자자문사의 등장이 예상된다. 다만 은행의 인가 단위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유관기관 공동으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발족·운영해 이번 안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2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한국 금융산업은 4차 산업혁명, 금융적폐 등으로 패러다임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며 “적극적인 진입정책 운영체계 확립, 진입장벽 완화, 인가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으로 기존의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영업 방식에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보험업의 경우 취급 상품의 리스크가 낮은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한 별도의 허가 기준을 마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연구원과 관련협회 대표가 참석해 열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련한다. 보험기간, 연간보험료 규모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소규모, 신생업체의 신규 진입 촉진을 위해 인가정책도 운영키로 했다.

지난 2003년 도입됐으나 1개(교보라이프플래닛)에 불과한 온라인전문보험회사 설립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쇼핑몰에서 간단 소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을 통한 보험가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필요 시 온라인전문보험사에 대한 자본금 요건도 200억원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재보험, 연금 등 시장

수요가 있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특화보험사 신설도 적극 허용키로 했다.

금융투자업에서는 중개전문특화 증권사의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비상장주식, 코스닥·코넥스, 사무증권·펀드지분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증권사에 대해 투자중개업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자본금 요건도 30억원에서 15억원(잠정)으로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일반 증권사에 적용되는 규제도 선별 적용키로 했다.

법인 영업 중심이었던 투자자문서비스도 개인으로 확대한다. 1인 투자자문회사의 설립 촉진을 위해 자문업의 등록 단위를 7개에서 2개로 통합하고, 자본금 요건을 8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팻(애완동물)신탁, 후견 신탁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신탁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인가단위를 세분화·신설하고 자본금 요건도 완화한다. 신탁 기능에 따라 관리형, 운용형, 개발형 등으로 구분하고 자본금 요건을 10억~250억원으로 차등하는 방식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